

# 여야 회동...野3당 “추경안 심사 보이콧”



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우선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민선으로 끝났다. 정 의장과 원우선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0분가량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회동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다.

## 4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 불구 민선 “송영무·조대엽 임명 강행시 7월 국회 어려워”

다. 그러나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추경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 3당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내일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7월 국회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거기에 두 야당이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무기력하다. 청와대 입장만 대변하고, 관철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요구하

는 특검과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 철회 등 둘 중에 하나라도 들고 와야 하는데 두개 다 안 들고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향해 “우리당에서 ‘쭈’ 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니 그냥 ‘미애’ 대표라고 하겠다”며 “미애 대표가 사실상 오늘도 검찰에 지침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죽이려고 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국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언제 진정한 협치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 여당만 찾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야당은 언제 가나?...반발 심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뒤 여당은 인사 차 방문했지만 야당은 찾아가지 않은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가뜰스나 협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야당이 강한 반대를 해온 탓이 크다. 실제 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김 부총리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일정 시일이 지난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당연히 야원에서는 김 부총리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김 부총리의 야당 방문이 지연되는 것은 아무래도 임명 과정에서 야원이 강한 반대를 해온 탓이 크다. 실제 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김 부총리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일정 시일이 지난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당연히 야원에서는 김 부총리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김 부총리 예방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내가 아는 차원에서는 연락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관계자는 “야당이 (김 부총리를) 인정하지 않으니 말을 못 꺼내는 게 아니겠냐”며 “국회와 협조할 부분이 있으니까 오로지 전화로 한다든지 접촉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부적격 파행의 정본으로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김 부총리가 사전 연락 없이 비공개로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당일 지도부가 모두 지방일정에 참석하면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박주선 비대위장은 “김 부총리가 사무실에 찾아온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5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만 예방한 상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은 아직 만남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이는 다른 각료의 경우와도 다르다. 보수정당이 반대했던 이낙연 총리도 가까스로 국회 동의를 얻었지만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 바로 국회에 방문해 여야지도부를 만났다. 당시 자유한국당만 총리 예방을 거절해 만나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임명장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국회에 방문해 마찬가지로 예방을 거절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났다. 당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 장관의 임명강행으로 상임위를 모두 보이콧한 상태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뉴스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가 근래에 예방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홍준표 대표도

김 부총리 예방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내가 아는 차원에서는 연락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관계자는 “야당이 (김 부총리를) 인정하지 않으니 말을 못 꺼내는 게 아니겠냐”며 “국회와 협조할 부분이 있으니까 오로지 전화로 한다든지 접촉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부적격 파행의 정본으로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김 부총리가 사전 연락 없이 비공개로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당일 지도부가 모두 지방일정에 참석하면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박주선 비대위장은 “김 부총리가 사무실에 찾아온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 부총리가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아무래도 여소야대 정국인만큼 김 부총리가 보다 적극적으론 야원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울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서로 만나야 한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치공화적으로도 야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야당의 협조라는 것은 갑자기 협조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김 부총리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 “실패한 패권정치 무덤 던지지 말아야”

홍 인사 강행에 친박 최고위원 “지도부 실패 예약” 쓴소리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친박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등 친박계와 홍준표 대표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자만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홍 대표를 향해 “지난 주 우리 당직 인선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홍 대표는 “당내 문제는 비공개로 하자”며 저지했지만 이 최고위원은 개의치 않으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 최고위원은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지명은 철회해야 한다”며 “국정운영, 당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인사고 두 번째도 인사다. 인사를 잘못하면 정당의 실패, 지도부의 실패도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뻔히 보이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며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당의 화합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가 이 암

흑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은 물론 당원마저 당을 해체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실패한 패권정치로 우리 스스로를 무덤 속으로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고 홍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당의 주요 당직을 정치인사, 측근인사, 자기 식구 뽑아 넣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문재인 정부의 친문코드 인사가 뭐가 다르냐”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로 당의 민주성, 건강성을 회복하고 적재적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말에 최고위원 5명과 제가 통화를 했고 제 의견에 동의해서 제가 대표로 발언한 것”이라며 “인선 과정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여의도연 구원장은 참 중요한 자리”라며 “원칙이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전혀 없어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윤호 기자

## 국민의당, ‘특혜채용-조작파문’ 동반특검

자유한국당-바른정당도 특검 제안...야야 대치 격화

국민의당이 10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자당의 ‘제보조작 파문’에 대한 동시 특검을 공식 제안키로 결의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특혜 의혹과 조작 파문 일괄 특검을 주장한 바 있어 특검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의 대치 구도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회를 열고 특혜채용 의혹과 제보조작 파문 ‘동반 특검’을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증거조작 사건과 함께 사전 원천인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다만 이미 과잉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증거조작 사건과 특혜채용 의혹 모두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당을 죽이려는 음모를 중단하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때 우리는 특검이라는 단어로 결국 증거조작에 대한 우리 당의 무책임이 진정 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특검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이제 바른정당에서도 특검을 얘기하고 자유한국당에서도 특검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이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야당 대표가 공공연하게 미필적 고의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여당과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 검찰의 과잉충성으로 봤을 때 검찰 수사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그리고 이유미의 증거조작 두 사건은 특검에 맡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은 특검에 대해 추천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재해없는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안전**을...

바로 지금 **"안전보금자리"**를 지어주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